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입법 드라이브… 재정·특례 관건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회동… 입법전략 논의 등
 이달 발의, 내달 국회 통과… 법안 완성도 높이기로
 정부·국회 대상 전략적 설득·지역사회와 소통 지속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2차 회동이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 및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 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

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검정이 이뤄졌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과 유사 시기에 광주·전남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며 “광주·전남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 형식으로 이달 말 또는 조만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권·특례 범위는 현행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사법·외교·국방 제의 전면적 권한이 양까지 요구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기조이지만, 국회 정개특위서 광주시의회의원 증원을 논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작은 차이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 큰 단결, 통 큰 합의로 작은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률안의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주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제고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연일 공청회,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 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의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간담회에서는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 행정구역 명칭, 청사 배치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대응체계 본격 가동

TF 제1차 회의 개최… 특별법·의회 운영 변화 집중 논의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남도의회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광역의회의 권한과 운영체계, 조직·재정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이전 단계부터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김대균 의장이 맡고, 상임위원회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13명의 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사용 △통합의회 청사로 현 전남도의회 청사 활용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황 유지 △행정통합 재정지원사업 주체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TF는 통합 이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사무처 조직 재편, 청사 활용, 의원 지원체계 변화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합 과정에서 의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운영 혼선이 발생하

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도민의 정서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의회 청사는 현재 전남도의회 청사가 올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증축공사 중에 있으므로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일부 리모델링만 거처면 통합 광역의회 청사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전라남도의 면적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약 24.7배에 달하는 만큼, 광범위한 지역 여건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의 전

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TF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의회는 이번 TF를 통해 통합 논의의 전반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의회 권한과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TF 전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필요 시 광주시의회 TF와의 협의도 병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혁신 신뢰는 ‘이용자 보호’에서 시작돼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 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도적 공

백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 부과 △(게시자)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이용자) AI 생성물 표시의 임의 제거 및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식약처·공정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이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호남 대통합’ 주장
특별법안 독소조항 개정도 촉구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사진)가 호남 500만 대통합을 주장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광주·전남만의 통합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광주와 전남, 전북의 세 단체장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체결했다”며 “이 업무협약의 취지를 살려 ‘500만 호남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AI, 반도체,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호남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특별법안에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에서 이달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속도전만 하는 것



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공무원 정원 감축 자동차 산업 누락, 교육 불평등 심화, 노동권과 재정 자립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광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가 부족하다”며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5·18 정신의 상징인 만큼 역사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만이 아닌 주민들의 주권이 강해지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주민 주권과 공공성에 바탕한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광주·전남 지방시대추, 행정통합 추진 ‘맞손’
공동간담회… 정책 지원·소통 강화 등 조력

자치분권·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주도키로 했다.

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와 전남도지방시대위원회는 21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발실에서 공동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시·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핵심 심의기구이자 지휘본부로서, 행정통합의 전 과정에서 정책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통합 기본 방향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 비전 수립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 및 특례 발굴, 시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지와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 공감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남은 임기동안 화순 발전에 집중하겠다”
구북규 화순군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구북규 화순군수(사진)가 21일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 군수는 이날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오직 화순 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으로 당원 자격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했던 구 군수는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는 “100년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건강한 삶이고 정치를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남은 기간 한 순간도 정치적 계산 없이, 처음 마음 그대로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가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의 선행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지락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 맹한별 화순발전포럼 대표, 곽행호 화순 천오면 백 소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희수 포프리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